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Federation of Korean Public Industry Trade Unions

성명서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노사정 대화를 거부한다. 앞으로는 대화, 뒤로는 강압적인 단체협약 개약 협박, 정부의 기만적 태도에 분노한다.

정부가 일방통행식 노동정책이 노사정 대화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어제(17일)개최된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발전위원회(공발위)가 결국 대화의 기본적인 신뢰조차도 보이지 않은 정부의 안하무인식 대화태도로 인해 결국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법률로 보장받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방만경영'의 티를 씌워 소위 '정상화 대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해왔다.

헌법과 관련 법률로 보장받고 있는 노동기본권에 대해 '방만경영 8대 항목'이라는 이름으로 왜곡 호도하면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강제로 개정토록 압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기관장 해임과 직원들의 임금을 강제로 삭감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상화대책 이행점검 중간평가에서 정부는 연일 새로운 단체협약 개약안을 추가하여 노사합의를 강요하면서 근로기준법조차도 무시하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 지난 2월 27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은 각 기관과 기재부가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기관별로 이행과제가 이미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편향의 노무사 등을 앞세운 평가단을 통해, 기관별로 10여개씩 추가적인 노동조건 후퇴요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 하고자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는 대승적 태도를 유지해왔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또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에 대한 조직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며, 정부 또한 산적한 노사관계를 사회적 대화로서 풀기 위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했던 것이다.

때문에 대화의 시작은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의 현안부터 해결하는 진정성을 보일 때 비로소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한 노사관계 현안을 풀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개최된 공발위에서 정부측은 공공부문 최대현안인 '정상화대책'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중간평가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단체협약 개약안에 대해서도 절대 철회하지 않겠다고 뽀니를 부렸다.

대화를 하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풀 수 있는 공공부문 현안조차도 일체의 타협을 불허한다면, 근로시간단축과 통상임금,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더 큰 노사 현안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 대화로 풀어낼 수 있겠는가? 이것은 노사정대화의 장을 오로지 노동자들의 일방적 양보와 굴복으로 악용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사정대화의 장을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한국노총 역시 정부의 사회적 대화가 노동권을 축소하고자 하는 기만적인 행태임을 분명히 직시하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노사정간의 대화를 일체 중단하기로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9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현안에 대한 논의없이 일체의 노정 대화도 불가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년 9월 18일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 공기업정책연대